

특집
논문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의 진자 운동, 1987-2017

포스트권위주의와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
동시성을 중심으로

신진욱 _ 중앙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이 글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와 그로부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하의 재권위주의화로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한 뒤에, 그 맥락에서 2016~2017년의 촛불집회와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미결로 남았거나 새로이 등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위험이 무엇 일지를 논한다.

각 목표에서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는 '포스트권위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결손 문제와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신자유주의화와 더불어 심화된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를 함께 갖고 있었으며,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 심화가 재권위주의화의 촉진제가 되었다. 둘째, 2016~2017년의 촛불집회는 한국 정치의 재권위주의화를 저지하고 1987년 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어적 항쟁으로서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시민 권력의 힘과 선출된 권력의 문책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거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이상을 표출했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셋째, 그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의 기동이자 2000년대 후반 이후 재권위주의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포스트

DOI: <http://dx.doi.org/10.31008/MV.39.2>

민주주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서 미래에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금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주요어:** 포스트권위주의, 포스트민주주의, 결손민주주의, 촛불, 탄핵

1. 서론

민주주의는 현실에 완전히 구현되어 있거나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현존하는 정치체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념적 좌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Dahl 1998). 민주주의는 소유할 수 있는 대상, 점령할 수 있는 고지, 완수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한번 갖게 되면 저절로 언제나 곁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역사 속의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존재하며, 정치사회적 환경과 세력구도에 따라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며 움직이는 생물, 바로 살아있는 인간들의 정치적 관계다. 그래서 현실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이념과 가치로서의 민주주의가 가리키는 이상에 미치지 못한 어느 지점에서 많은 결함과 문제, 내적 모순과 외적 도전에 의해 끊임이 가고 기울어진 형상으로 존재하며, 민주주의자들이 정성들여 돌봐야만 생기를 유지하고 더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에서 킨(John Keane)은 “민주주의는 우리가 도달한 영원불변한 정치적 목적지가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현

존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의 “부러지기 쉬운 불확정성(brittle contingency)을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eane 2009, xiv).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이전’, ‘민주화 이후’라는 표현은 독재의 종식 이전과 이후를 뜻하는 간편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최소한의 의미로 축소하고 마치 민주주의가 완결된 과제인 듯이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민주화란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들, 오래된 구조적 문제들과 대결하면서 민주주의를 항상 새롭게 하는 끝없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것은 ‘민주화 이후’의 추가적 조치가 아니라 영구한 ‘민주주의의 민주화’(Offe 2003)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불확정성의 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2016~2017년의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1987년 이후 지속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극복했으며, 2017년의 전환 이후 남아 있는, 어쩌면 미래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문제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연인원 1,700만 시민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스펙터클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막은 대역사를 이룬 지금, 이 글은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주적 저력을 예찬하는 공식적 서사를 반복하는 대신에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온 핵심 문제,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2016-17년의 촛불과 탄핵의 의미, 그리고 미래에 부상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의 성격을 성찰해보려 한다.

이상의 목표는 한국의 맥락에 국한된 역사기술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해 있는 보편적 문제

상황과의 연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질 것이다. 여기서 뜻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는 인과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성격의 것이다. 즉 이 글의 관심사는 세계적 환경과 한국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의 여러 보편적 문제가 한국에서 어떤 특수한 순서와 조합으로 등장했으며 그 문제 상황의 심화와 극복 과정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회들에 줄 수 있는 이론적 함의가 무엇인가다.

그러한 관심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첫째, 역사적 관점의 씨줄과 비교론적 관점의 날줄을 교차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는 두 사례군을 비교하고, 둘째, 그와 같은 역사·비교론적 고찰에서 추출된 민주주의 문제의 보편적 요소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특수한 형태로 결합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한 후에, 끝으로 결론에서 다시 그것의 보편적 함의를 도출하는 순환을 전개한다.

먼저 첫 번째 측면에서는 두 가지 문제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그 하나는 1960~1980년대에 권위주의 지배를 경험했던 아시아, 중남미, 남유럽 등의 여러 사회에서 독재 종식 이후에도 오랫동안 민주주의 요소와 권위주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포스트권위주의(post-authoritarian)’ 사회의 문제 상황이다(Diamond 2002; Merkel 2004). 다당제와 선거경쟁의 제도적 형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법치주의, 권력 분립,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형식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치권력이 민주주의의 결핍 상태를 하나의 레짐으로 고착시키고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세계화, 금융화, 신자유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들에서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의 문제다(Crouch 2004). 여기서 근본 문제는 대의정치가 대자본을 비롯한 사회권력에 종속되거나 밀착되어 점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사회 내에 민주주의 자체의 정당성과 수행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해온 보편주의적 가치들에 도전하는 극단주의자들과 소수자 혐오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두 번째 측면, 즉 보편-특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글은 포스트권위주의와 포스트민주주의의 보편적 문제 요소들이 한국에서 어떤 특수한 형태로 조합되었으며, 어떤 세력 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재권위주의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1987년 이후,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단지 ‘형식적’, ‘제한적’, ‘보수적’ 민주주의 등과 같은 특정한 결핍 또는 편향의 상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난점은 포스트권위주의와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 동시성이라는 복잡한 구조와 씨름해야 했던 상황에 있었다. 즉 한편으로 권위주의 유산을 청산하고 권위주의 정치의 부활을 막아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어갈수록 민주주의 정치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할 과제가 중

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화가 미약하게만 진전되어 포스트권위주의의 문제가 여전히 압도적이거나, 민주주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어서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되는 사회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동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1987년의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도입 이후 30년 동안 한국에서는 이 두 문제가 어떤 순서와 형태로 발현되고 결합되었는가?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의 급격한 재권위주의화로 이르게 되었는가? 2016~2017년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나? 2017년의 전환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정확히 어떤 문제를 극복했으며,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가? 이상이 아래에서 다룰 질문들이다.

2. 오늘날 민주주의의 양대 문제: 포스트권위주의와 포스트민주주의

1990년대는 세계의 자유주의적 주류 정치 세력들에게 환희와 도취의 시간이었다. 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는 붕괴되었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독재 정권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 테올로기의 정당성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보였고 (Fukuyama 1992), 권위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회들은 비록 속도와 완성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유화, 민주화,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차

차 나아가리라는 암묵적 믿음이 만연했다.

하지만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더욱 분명하게, 세계의 정치적 역사가 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불안한 인식이 퍼져갔다. 거기에는 무척이나 다양한 진단과 전망, 이론과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 하나는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포스트 권위주의 사회들에 특징적인 결손 민주주의 또는 준(準)권위주의의 문제며,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선진민주주의 사회들 역시 직면하고 있는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다.

1) 포스트권위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결손

독재의 종식과 성공적 민주화가 관건이었던 1980~1990년대에는 자유화, 민주화, 공고화, 항구적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행의 관념이 학계에서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선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은 1989년에 41%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60%를 넘어서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한 시점에 공고화되었다고 해서 그 체제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음이 곧 분명해졌을 뿐 아니라 (Gunther et al. 1995, xiii), 많은 포스트권위주의 사회가 독재로 회귀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손상태가 하나의 독특한 ‘레짐’으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학계의 주목을 끌기 시

〈표 1〉 전 세계 국가 중 선거 민주주의 체제 비율의 추이, 1989-2014

| 조사연도 | 1989 | 1991 | 1993 | 1995 | 1997 | 1999 | 2001 | 2003 | 2005 | 2007 | 2009 | 2011 | 2013 |
|------------|------|------|------|------|------|------|------|------|------|------|------|------|------|
| 조사국가 | 167 | 183 | 190 | 191 | 191 | 192 | 192 | 192 | 192 | 193 | 194 | 195 | 195 |
| 민주국가 비율 | 41 | 49 | 57 | 60 | 61 | 63 | 63 | 61 | 64 | 63 | 60 | 60 | 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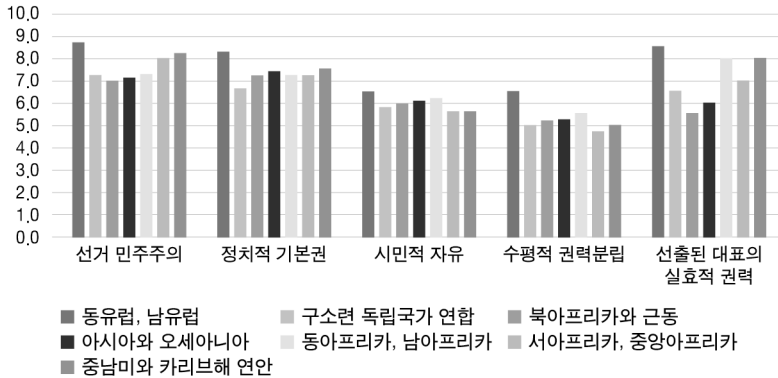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4.

작했다(Carothers 2002).

권위주의 레짐을 종식시킨 나라들이 더디지만 점차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애초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많은 곳에서 선거와 정치 경쟁을 보장하는 외양을 띠면서도 실제로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 시민의 기본권, 공정한 정치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만성적이 되었다(O'Donnell 1996).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시킨 크로아상(Croissant 2010)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에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 국가기관 간의 수평적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물론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이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권위주의 사회의 고유한 문제는 헌법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제도와 실제에서의 명백한 결함이 선거제도 자체의 민주적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데 있었다. 즉 선거민주주

(그림 1) 민주주의의 하위 영역별 민주주의의 지수, 2008



자료: Croissant(2010, 107); 분석 자료는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2008.

의는 작동하되 그 이상의 더 많은 민주주의는 아직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경쟁으로 축소된 민주주의 때문에 선거 자체가 부패한 기득권 집단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제도적 기제로 정착되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정치학과 사회학에서의 비교민주주의 연구는 이처럼 민주주의도 권위주의도 아닌 중간지대의 체제를 다양한 개념으로 포착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회색지대의 정치체제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에 보다 가까운 유형에서부터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유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 각 유형은 혼합체제, 결손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 비자유 민주주의, 준-권위주의, 위장된 민주주의, 선거 권위주의, 경쟁적 권위주의 등 다양한 개

념으로 명명되고 있다(Croissant 2010; Diamond 2002; Diamond et al. 1988; Levitsky and Way 2010; Merkel 2004; O'Donnell 1994; Schedler 2006; Zakaria 1997).¹⁾

선거가 현대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문제는 정치권력이 선거로 얻은 정당성을 토대로 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적 반대의 기회를 제한하며 국가기구를 사유화하여 다음 선거에서 다시금 권력을 재생산하는 순환기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회색지대의 정치체제가 단지 더 공고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레짐으로 공고화되어 더 이상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여기서 진정한 문제는 단지 민주주의가

1) 여기서 '중간 지대' 또는 '회색 지대'라는 모호한 용어로 지칭한 정치체제들은 학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다이아몬드(Diamond 2002)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많은 결손을 갖고 있는 체제를 '선거민주주의'로 개념화하여 보다 발전된 '자유민주주의'와 구분했으며, 선거민주주의의 요건조차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군을 '혼합체제'로 명명하여 이를 다시 '경쟁적 권위주의'와 '패권적 경쟁권위주의'로 분류했다. 이와 달리 메르켈과 크로아상(Merkel 2004; Croissant 2010)은 보다 폭넓은 민주주의 개념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결손 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ies)'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론은 혼합체제를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결손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 권위주의' 체제로 구분하기도 했다(Bogaards 2009). 이에 관련된 이론적, 개념적 틀을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오창현(2009)과 신진욱(2016)을 보라.

‘아직까지’ 결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요소와 비민주적 요소의 결합이 ‘항구적인’ 체제로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2) 신자유주의 시대의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

한편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는 선진적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적 제도들이 형식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이 거대 경제 권력과 결합하거나 그들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회 계층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민주적, 반민주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점에서(Crouch 2004, 21-22), 앞에 서술한 포스트권위주의적 혼합체제와 유사한 모호성을 띤다. 하지만 포스트민주주의의 특수성은 선거정치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민적 자유 등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가 대체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다수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통과 요구를 감지, 반영,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불신을 받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더 나은 민주주의’라는 빛이 들어올 틈이 남아 있지 않은 오래되고 견고한 건축물 안에서 파괴적인 내파(內波)의 에너지가 퍼져가는 상황인 것이다.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들은 1970년대 이래로 여러 중대한 사회구조적 변동을 겪어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탈산업사회화, 계급정치의 쇠퇴, 복지국가의 축소와 재구조화 등이 그것이다.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는 그러한 변화된 구조적 조건 하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그 실질적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고, 오랫동안 비교적 안정되게 지속된 정당체계가 흔들리게 되면서 심화되고 확산되었다(Crouch 2004; Della Porta 2011; Merkel 2014). 더욱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 자체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다. 민주주의가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있을 때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어떤 해석들과 변화의 비전 속에서 그 상황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문제해결을 위해 더 나은 민주주의가 와야 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는 이미 문제해결에 실패한 것이냐?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포스트민주주의에 대한 반응은 후자의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존재하며, 그것은 미약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스페인에서는 대대적인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인 ‘분노한 자들의 운동’(5·15 운동)이 전국적으로 폭발하여 수많은 자생적 지역위원회와 노동·고용·주거·젠더 등의 주제 위원회가 건설되었다(Castels 2012). 이들의 중심 조직의 하나이자 운동 전체의 슬로건이기도 했던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democracia real ya.)’라는 외침은 포스트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민주적 응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잘 알려진 미국의 월가점령운동(Occupy Wall Street Movement) 역시 2011년에 스페인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으로, 스페인과 같이 신생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체계를 변화시키진 못했지만 불평등과 부의 집중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가치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Calhoun 2013; Tarrow 2011).

하지만 이들은 제도정치의 권력 지형을 크게 바꾸지 못했거나, 설령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정당처럼 성공적인 사례조차 돌풍은 오래 가지 못했다.²⁾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인종주의, 외국인 배척, 문화적 헤테로포비아, 그 밖의 소수자 혐오 성향의 급진 우익 대중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 법치주의, 보편적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를 공격하거나 냉소하는 태도가 노동계급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 내에서 확산됐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기초하여, 또 그것을 촉진하고 동원하면서 급진우익은 제도정치 무대에 재빨리 올라섰다.

2000년대 초반에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자유당(FPÖ)이 집권 연정에 참여할 때만 해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가하는 등 격한 반

2)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포데모스(Podemos)’는 스페인의 신생 정당으로서, ‘분노한 자들의 운동’이 일어난 지 3년 후인 2014년에 창당해서 다음 해 총선에서 21%를 획득하여 순식간에 제3당으로 등장했고, 1975년 민주주의 도입 이후 오랫동안 스페인 정치를 지배해왔던 중도좌우파 정당인 국민당(PP)과 사회당(PSOE)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부터 2006년에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창당한 신생 정당인 ‘시우다다노스(Ciudadanos)’(‘시민들’이라는 뜻)의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도 현재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우다다노스’는 문화적 자유주의와 스페인 내셔널리즘을 혼합하여 전통적인 좌우 구분으로 그 성격을 단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창당 시 중도좌파 성향에서 현재는 우파 성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Bosch and Durán 2017; Quiroga 2018).

발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주요 유럽 국가에서 급진우익 세력이 정치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독일 사민당의 ‘새로운 중심’ 등 좌파정치의 변화 시도가 관심의 초점이었다면, 2000년대 와서는 전선이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하여 유럽의 급진우익 정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 신진 정치세력이 기존의 중도 좌우 세력을 함께 공격하면서 일자리, 소득, 문화, 정체성 등 여러 면에서 대중의 불안과 위기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동원하고 있다.³⁾

3) 특히 유럽에서 중도 좌우파를 두 기둥으로 하던 오래된 정당체계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독일에선 2014년부터 ‘서양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PEGIDA)’ 운동이 확산되면서 1970년대 이후 독일 사회에 형성된 포용적 에토스를 위협했고, 우익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 연방의회의 제3당으로 등극했다. 프랑스에선 극우 정당이었던 ‘민족전선(Front National)’이 노선을 유연화하면서 그 지도자인 마린 르펜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위협적 존재로 부상했다. 심지어 모범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조차 극우인종주의 정당에서 복지내셔널리즘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변모한 ‘스웨덴 민주주의자(Sverigedemokraterna)’가 최근 선거에서 제3당으로 올라섰다. 이에 관한 국내 연구문헌으로 김주호(2017), 김한식(2017), 신광영(2016)을 보라.

3.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적 문제와 그 전개 과정

1)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의 특수성

한국 민주주의 역시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불안과 위기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편적 요소들 중 특히 어떤 것들이, 어떤 조합으로 만나서, 어떤 총체성을 만들어내는지는 사회마다 다양하다. 한국 사례는 1987년의 민주주의 도입 이후, 특히 1997~1998년에 금융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미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포스트 권위주의적 문제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포스트민주주의적 문제를 함께 안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추상적으로는 어느 사회에서나 두 문제 상황이 공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독재 이후 민주주의를 도입한 중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사회는 여전히 헌법국가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건을 크게 결여하고 있어서,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는 포스트민주주의 현상이 중심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반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포스트권위주의의 문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포스트권위주의 문제와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의 공존은 독재 과거를 갖고 있되, 비록 한 시적으로라도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이 상당한 정도 진전된 국가들에 특징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Diamond 2002, 26)는 2000년대 초반에 여러 측면에서 민주주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전체 분석대상 국가 중 30%, ‘선거민주주의’만을 충족시키는 국가가 19.3%,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명백한 독재가 아닌 국가가 전체의 36.7%, 명백한 독재 국가가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2018년 시점에 세계 정치체제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이 글의 목표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편으로 권위주의의 잔재 또는 권위주의로의 회귀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민주주의의 정착이 이제 상당한 정도 이뤄져 있다는 이중성이 그 정치체제의 두드러진 특성이 되는 국가군이 그다지 넓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다이아몬드(Diamond 2003)의 분류에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대만 등과 더불어 단순한 선거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유형으로 분류됐고, 2000년대 후반에도 크로아상(Croissant 2010; Croissant and Schächter 2009)은 민주주의 국제비교 연구에서 한국과 대만을 ‘결손민주주의’가 아니라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하면서 양국이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더구나 2018년의 현 시점에서 남미 대부분의 나라는 선거민주주의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한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됐던 여러 동유럽 국가가 급속히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⁴⁾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이나 대만 등 일부 나라는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와

결핍된 민주주의 체제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의 문제들을 여기에 다시 도입하자면, 한국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구(舊)권위주의 세력의 정치적 재기를 억제해야 하는 포스트권위주의 사회의 과제와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정치의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포스트민주주의의 도전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바로 이 이중적 문제상황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간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쟁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이제 ‘분배 대 성장’ 또는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의 전선인가? 양자 모두 중요하다면, 이 이중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한 많은 학술적 문헌은 한국 정치가

-
- 4) 1980~1990년대에 독재가 종식되고 선거제도와 다당제가 도입된 남미의 다수 국가에서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민주주의의 부분적 결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권위주의에 더 가까우며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수준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evitsky and Way 2010; Schedler 2006). 남미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상징하던 브라질에서조차 최근 권위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볼소나로(Jair Bolsonaro)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선거 권위주의’ 또는 ‘선출된 독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López 2018; Manz 2018). 한편 중부유럽과 동유럽에서는 2000년대까지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던 헝가리, 폴란드 등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회귀하는 등, 지역 전체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Bugarich 2015; Greskovits 2015).

민주주의 제도와 정당정치의 발전을 이루는 데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노동과 평등을 정치의제로 수용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부단히 비판해 왔다(김동춘 2006; 손호철 1997, 2006; 최장집 2002, 2006).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가지 숙제를 푸는 방법론인데, 현실정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권위주의 적폐를 청산하는 정치개혁 과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권위주의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허용했다.

2) 한국 민주주의의 진자 운동

한국에서 1987년 이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부침(浮沈)이 전개된 과정은 일체의 단계론적 사고를 붕괴시킨다.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의 안정화로 이르는 이행론의 도식은 부분적 자유화, 정치제도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공고화, 그리고 영구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단계론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는 첫 번째 단계에서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까지 권위주의 세력이 정치권력을 분점하며 잔존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어 성공적인 공고화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 이들 최초의 민주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급속한 재(再)권위주의화를 초래했고, 네 번째 단계에서 대

대적인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재(再)민주화 과정이 개시되는 전진-후진-전진의 진자 운동을 보여준다.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단계론적 이행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였던 짧은 시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독재가 종식되고 정당 경쟁과 선거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바로 그 제도적 기제를 통해 구(舊)권위주의 세력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문민정부가 등장한 후에도 상당 기간 정치권력을 분점할 수 있었다. 1987년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양김 후보의 분열과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당선, 1990년 3당 합당과 1993년 김영삼 정권의 출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성공적인 정치군부 해체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전형적으로 권위주의 정치엘리트의 잔존과 점진적 약화로 나아가는 단계를 보여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이제까지의 민주주의 결손이 권위주의 유산으로 인한 이행기적 한계였던 것처럼 보였고, 두 정권은 일련의 정치개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인 상태로 올려놓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선(先)정치개혁 후(後)분배정의의 단계론적 사고로 정국을 운영하여 정권 말기에 가서 신구(新舊) 권위주의 세력의 급속한 부상을 허용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중반기인 2004년에 탄핵 역풍과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얻었지만, 집권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

관련법 개정, 과거사 규명법, 사학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에 몰두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문제 해결을 꼽았고, 특히 정권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20~30대에서 이러한 소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의제는 정권 후반기에 가서야 비로소 정권의 관심사로 들어왔다(신진욱 2015; 한귀영 2011).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둥이 정비되었고 사회서비스 제도가 대폭 확충되는 등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 정권의 사회정책과 경제·노동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1차적 분배 수준에서의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 증대를 국가적 재분배를 통한 복지 확충으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 결과 두 정권은 1997년 이후 심각해진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많은 측면에서 그 원인 제공자가 되기까지 했다(손호철 2006; 이병천 2002; 장진호 2013; 조희연 외 2009; 최장집 2008).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모든 지자체장을 석권하고, 2007년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에서 역시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소득 격차, 자산 격차, 대학 등록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지표의 꾸준한 악화가 있었다(표 2).

〈표 2〉 노무현 정부 시기 소득, 자산, 교육 관련 지표 추이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소득 지니계수 | 0,279 | 0,270 | 0,277 | 0,281 | 0,285 | 0,292 |
| 상대빈곤율 | 10,0 | 10,6 | 11,4 | 11,9 | 11,9 | 12,6 |
| 총자산 지니계수 | 0,593 | 0,598 | 0,607 | 0,628 | 0,632 | 0,621 |
| 자산 상위 10% 점유율 | 48,3 | 47,6 | 48,7 | 51,6 | 50,5 | 49,0 |
| 국립대학등록금 | 243 | 262 | 286 | 307 | 339 | 381 |
| 사립대학등록금 | 510 | 545 | 577 | 606 | 646 | 691 |

자료: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 2인 가구 이상),
 자산: 전병유(2016, 68, 69),
 대학 등록금: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단위: 만 원).

물론 2000년대 후반의 권력 지형의 급변에는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보수 언론의 프레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했으며 순전히 경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 문제가 결정적 중요성을 가졌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대선 이슈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의 격차 완화 문제였고(강원택 2008), 실제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 역시 경제 문제에 관련된 전망 투표 경향, 즉 이명박 후보가 경제문제를 해결해주리라는 희망이었다(권혁용 2008; 류재성 외 2008). 이것은 단순히 사회경제 상황의 직접적 반영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효과적인 전략에 의해 매개된 결과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취한 전략은 ‘무능한 진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었고, 이들이 제시한 미래의 약속은 ‘국민성공시대’

였다(신진욱·이영민 2009). 바로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였던 것이다.

바로 이 토대 위에서 9년에 걸친 광범위한 정치사회적 재권위주의 화가 전개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 후에 그토록 빠른 재권위주의 화를 가능케 한 제도적 조건은 오랫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약한 고리로 지적되어 왔던 '87년 정치체제'의 여러 문제들이었다. 단순다수결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 정당과 의회 권력의 미약함, 시민적 자유의 제약, 노동조합 등 조직된 시민사회 층위의 저발전 등이 그것이다(김종엽 2009, 2017; 손호철 2006; 최장집 2002). 특히 그동안 국제학계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두드러진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위임민주주의(O'Donnell 1994)의 문제, 즉 선출된 권력이 수평적 권력분립 장치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구조야말로 급속한 재권위주의화를 가능케 한 핵심적 기제였다.

이처럼 지난 30년 간 한국 민주주의의 여정은 1987년 이후 권위주의의 잔존, 1998년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 2008년 이후 권위주의의 복귀, 그리고 2017년 촛불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전진, 역진, 전진의 과정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치는 한편으로 다른 포스트 권위주의 사회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었으나, 것처럼 궤도에 오른 민주주의 정치가 사회경제적 불안과 격차의 문제를 권위주의 정치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죽은 줄로만 알았던 권위주의 세력이 도처에서 몸을 일으켜 권력을 다시 움켜쥐고 역사를 뒤로 돌릴 기회를 허용했다. 이 경험은 선(先)정치개혁 후(後)분배정의 또는 선

(先)정치민주화 후(後)경제민주화와 같은 단계론적 도식으로는 둘 중 하나도 성취할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오래된 근대화 이론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옳진 않았지만, 새로이 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에서 경제적 안정과 분배 정의가 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키는 데에서 분명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Haggard and Kaufman 2008).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 과제는 경제 안정과 분배 개선을 달성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그 정치적 자산으로 구(舊)권위주의 세력의 토양을 허무는 정치-경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⁵⁾ 한국에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러한 선순환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고, 권위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체제를 내놓고 부정하는 대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민주주의자들의 무능’을 끊임없이 공략하여 권력을 쥐었다. 상당한 민주화를 달성한 후에 전면예부상한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 상황은 노쇠한 권위주의 세력에게 재생의 에너지를 불어넣은 신비로운 영양제이자, 포스트권위주의의 사회

5) 나치 패망 직후인 1950년대에 서독은 정확히 이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었던 사례다. 독일에선 나치 통치하에서 광범위한 계층이 독재를 통한 국력 신장에 동조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1950년대 초반까지 인구의 다수가 권위주의를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플랜을 통한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물질적 삶의 향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동의의 기반을 크게 확대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abriel 1987; Merritt and Merritt 1970; Schmidt 1998).

의 문제를 역사의 무대에 다시 불러들인 악마적 주술이었던 것이다.

4. 2016~2017년 촛불과 탄핵의 역사적 의미

2016~2017년의 대대적인 촛불집회, 그에 뒤이은 탄핵과 정권교체는 앞 장에서 서술한 권위주의화의 과정을 극적으로 종식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단순히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자화자찬의 미사여구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 그것의 의미는 포스트민주주의 문제를 자양분으로 하여 권위주의 세력의 힘이 증폭되었던 역사적 과정 위에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 맥락에서 보았을 때 2016~2017년의 촛불과 탄핵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극복하고 성취한 것은 무엇이며, 미결의 상태로 남겨둔 것은 무엇인가?

1) 소극적 의미: 권위주의화의 저지, 민주주의의 복원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 2016~2017년의 촛불과 탄핵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중대하면서도 제한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모호한 결합 상태가 항구적 체제로 고착되는 것을 저지한 사건이자, 권위주의 정치의 정당성을 압도적 다수의 공중(公衆)의 동의와 헌법적 국가제도의 절차에 따라 공공적이고 공식적

으로 기각한 사건이었다.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보았을 때, 2016~2017년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권위주의적 퇴행을 저지하고 87년 민주주의의 제도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체제 복원(restoration)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시민들은 ‘도래해야 할 체제’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널리 인정받은 ‘현존하는 체제’의 수호자로서 그 체제를 훼손하는 통치자들에 저항하며 체제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집회는 1987년 6월 항쟁의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급진화한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의정치 외부의 대중행동이 선출된 제도권력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적 압력과 압도적 여론 환경을 통해 87년 민주주의로 세워진 의회,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구가 독립성을 갖고 작동할 수 있게끔 고무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실현됐다. 촛불집회의 다수 참여자들이 지향했던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급진적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정치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그것의 작동을 정상화시키는 것, 즉 제도정치 개혁을 위한 ‘영향의 정치’였다.⁶⁾ 그런 의미에서 2016~2017년 촛불집회와 탄

6) ‘영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는 1989년 공산주의 체제 붕괴 당시에 동유럽에서의 민주화 과정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저항운동 세력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특징짓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이후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개념은 강력한 시민사회 세력이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이 87년 민주주의의 극복이라기보다는 “87년 체제를 통해서 87년 체제의 위기를 봉합하는”(권영숙 2018, 62) 것이었다는 지적은 비록 일면적인 평가지만 진실의 한 조각에 해당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은 2016~2017년의 촛불집회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특징적이었던 포스트권위주의와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 동시성이라는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의 기동, 즉 포스트권위주의 문제의 전면화를 격렬히 저지한 데 반해 또 하나의 기동, 즉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는 거의 생점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윤철(2018)은 1987년 민주주의가 노동의 배제, 평등 의제의 배제, 국가권력의 공적 작동의 장애라는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으나, 촛불집회는 세 번째의 민주주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대중행동이 일어나는 ‘마지노선 민주주의’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6~2017년 촛불집회는 순전히 민주주의 제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적 규범을 확인하는 방어적 성격의 항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처럼 낮은 수준의, 그러나 최대다수의 저항 행동이 발생한 것은

영향력의 극대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관념은 처음에는 1980년대 폴란드 연대노조운동의 성격을 규정한 ‘자기제한적 혁명(self-limiting revolution)’의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1990년대부터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저항행동의 한 유형을 뜻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Cohen and Arato 1992; Habermas 1992; Staniszki 1984). 한국에서는 김호기(1995; 1999)가 시민운동과 대의정치 간의 관계를 논하면서 ‘영향의 정치’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부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배제의 정치’의 산물이었다. 두 정권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소수 기득권 집단의 결집으로 지탱되었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되거나 배제되었다고 느낀 광범위한 계층이 양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지배 블록의 분열까지 낳게 되었다. 것처럼 소외되거나 적대적인 계층이 광범위했던 만큼 그 안에는 사회구조적으로 이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이 공존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최대공약수에 집중할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만 단일한 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다.

2) 적극적 의미: 시민 권력과 민주주의 이상의 확장

그러나 우리가 제도의 영역을 넘어 민주주의를 움직이고 혁신하는 시민 행위자의 차원에까지 시선을 넓히면, 2016~2017년 촛불집회는 단지 권위주의적 퇴행을 저지했다는 방어적 성격에 국한되지 않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첫째는 강력한 시민 권력의 확인이다. 시민들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방어에 있었다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방어를 시민들의 손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선거제도 하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많은 나라 중에서,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압도적 다수 시민의 민주화 항쟁으로 저지하고 후속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⁷⁾ 그런 의미에

서 우리는 그토록 지난한 민주주의의 방어가 성공한 후에야 사후적으로 그것의 한계만을 지적하는 관조자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자신을 단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적 권력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연합된 행동으로 표출한 사건이었고(김선욱 2018),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시민 권력이 전면에서 부상하는 “역동 민주주의”(박영신 2018)의 강력한 잠재력이 한국 사회에 존재함을 입증한 사건이었으며, 시민 권력이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힘으로 등장한 ‘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이었다(정병기 2018). 이 ‘사건’을 가능케 한 사회적 힘은 탄핵을 달성한 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으며, 이후 도래할 또 다른 역사적 국면에서 다시금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문책 가능성(accountability)의 확인이다.⁸⁾ 2016~2017년의 촛불집회는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자 선출이라

7) 아마도 2014년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에 뒤이어 민진당이 집권한 사례 정도가 한국에 비교할 만한 것이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대단히 폭력적인 독재 체제하에서 지배해온 국민당이 2008년에 재집권한 후에 대만의 진보적 시민사회는 재권위주의화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왔으며, 2014년에 국민당이 중국과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인 양안서비스협정을 날치기 통과하려다 대학생들이 의회를 점령하는 등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은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이 집권했다. 해바라기 운동의 요구와 쟁점을 잘 정리한 글로 Jones and Su(2015)가 있으며, 대만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역사를 개괄한 논문으로 Ho(2010)가 탁월하다.

는 87년 민주주의 원리를 단지 재확인한 것이 아니라,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면 그 죄과를 드러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책 가능성의 원리를 처음으로 확인한 사건이었다. 자유공정 선거에 더하여, 이제 법치주의, 권력분립, 시민적 자유, 그리고 선출된 권력을 징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이념이 촛불과 탄핵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각인됐다. 물론 그러한 이념이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배 질서의 동요와 전복은 사상과 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이상을 담지한 실제적 세력의 집단화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이다(Joas 2017). 정치권력에 대한 문책가능성이 헌법 조문이나 민주주의 이론에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국가기구의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중대한 역사적 성취다.

셋째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이상의 확장이다. 2017년 촛불집회는

-
- 8) 정치학에서 ‘accountability’는 ‘책임성(responsibility)’ 또는 ‘반응성(Responsiveness)’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셰들러(Schedler 1999)는 이 개념의 핵심이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니며(answerability), 거기에 공적 의무의 훼손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이 이를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enforcement) 두 가지 점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개념은(필자의 이전 여러 논문을 포함하여) 종종 ‘책임성’, ‘책무성’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는 박종민·윤건수(2014)와 박종민·오현진(2018)이 ‘문책성’이라고 번역한 것이 그 개념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한다고 보고 이를 약간 변형하여 ‘문책 가능성’으로 한다.

비록 1987년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것이 표출한 민주주의 이상은 1987년과 질적으로 달랐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다양한 급진적 요구가 등장했지만 항쟁 주체들의 요구사항은 궁극적으로 ‘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이라는 구호로 압축됐고 그 이후 87년 민주주의 제도의 구현 역시 거기에 제한됐다. 그러나 이 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계속된 여러 차례의 대규모 촛불집회와 그 밖의 시민적 저항들은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 검찰·국정원·법원 등 국가기구의 정치 도구화, 국가의 사유화와 공적 기능 상실, 정경 유착과 공공 부문 사유화 등 훨씬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훼손을 문제 삼았다.

2016~2017년 촛불집회가 이와 같은 전사(前史)가 누적되어간 맥락 위에서 폭발한 것이라면, 그 참여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 모든 문제의 개혁을 위한 최종적 해결책이 아니라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졌으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7년의 전환이 열어놓은 정치적 공간 속에서 87년 체제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넘어서는 “여러 겹의 민주주의 전선”(천정환 2018)이 형성되고 있으며, 친박 세력을 비롯한 구(舊)권위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무해할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다수 시민이 느끼게 되는 만큼 새로운 민주주의 전선이 집단화된 균열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

3) 촛불은 혁명이었나?

이상의 소극적, 적극적 의미를 종합해봤을 때, 촛불집회는 ‘혁명’이 었나? 혁명이라는 개념은 역사학과 사회과학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었 고 그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언할 수 없다. 혁명의 정 의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자가 역사와 사회의 어떤 차원을 중요시하 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자리에서 혁명 연구의 이론적, 방법 론적 쟁점으로 깊이 들어가서 논의할 수 없는 이상, 혁명 연구에서 제시되어온 다양한 수준의 개념 정의를 하나씩 짚어보는 방식이 최 선일 것이다.

우선 가장 엄격한 혁명 개념은 스카치폴(Theoda Skocpol)에게서 발견 된다. 그는 거대한 계급투쟁에 의해, 사회구조의 변혁과 정치구조의 변혁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혁명이라는 개념 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Skocpol 1979, 4-5). 이것은 혁명을 ‘집단행동’, ‘저항 행동’, ‘쟁투적 정치(contentious politics)’와 같은 보다 넓은 개념의 한 형태로 모호하게 섞어 넣는 것에 반대하여, 다른 역사적 현상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건으로서 정의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정의를 따랐을 때, 2016~2017년 촛불집회를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 명, 중국 혁명 등의 세계사적 대사건과 함께 혁명의 사전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그보다 조금 더 느슨한 혁명의 정의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혁명사 연구의 중요한 학자인 브린튼(Crane Brinton)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신해서 극적이며 급격하게 어떤 영토적 정치체의 영도권을 장악”(브린튼 1983, 14)하는 데 성공한 경우를 혁명으로 간주했다. 사회학자 킬리(Charles Tilly) 역시 혁명에 대한 느슨한 정의의 이점을 강조했다. 엄격한 정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회구조와 계급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민중들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모든 급격하고 광범위한 지배체제의 변화”(Tilly 1999, 23)를 혁명의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 정의를 따른다면 촛불집회는 혁명이었나? 촛불집회는 저항의 장기적 주기 속에서 그 규모, 범위, 강도가 예외적으로 고조된 사건임에 틀림없으며, ‘민중들의 압력에 의해’(킬리) ‘극적이고 급격하게’(브린튼)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7년의 정권 교체로 새로운 집단이 ‘영토적 정치체의 영도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급격하고 광범위한 지배체제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슨한 정의를 따른다 해도 촛불집회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혁명적이었다.

끝으로 가장 느슨한 혁명의 정의에 따른다면 어떨 것인가? 위에서 촛불집회가 혁명의 전당에 오를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촛불집회의 ‘결과’에 있었다. 즉 그것은 사회구조도, 정치체제도, 지배집단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실패한 혁명도 혁명인가?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실패한 혁명의 사례는 오늘날 흔히 ‘1848년 유럽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1848년 봉기는 파리에서 시작되어 불과

녁 달 만에 유럽 도처에서 군주제를 붕괴시키고 공화국을 세웠지만, 곧 지배 세력의 반격으로 무너지고 구체제가 복고되었다. 만약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른다면, 혁명 개념은 정치경제적 구조 변동을 낳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규모 대중행동과 정치사회적 격동이 일어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브루이 2009, 278). 홉스봄(Eric Hobsbawm)은 『혁명의 시대』의 맨 뒷장에서 1848년이 파리에서부터 유럽의 모든 곳으로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까워”져 “마침내 폭발”(홉스봄 1984, 448)했던 저변의 혁명적 에너지의 분출이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실제로 1848년의 에너지는 이후 수십 년 간 유럽의 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1860~1870년대의 최초의 전국적 노조연맹과 노동자 정당, 혁명 사상들이 여기서 싹트고, 1880년대에 독일에서 최초의 국가복지 체제가 탄생한 것도 그에 대한 보수 엘리트의 대응이었다.

2016~2017년 촛불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혁명’일까? 19세기 혁명과는 다른 의미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새로운 변혁의 상상력과 에너지를 세상에 뿌린 것일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촛불집회에 대한 즉각적 평가에 국한될 수 없는 긴 시간성의 지평으로, 더 깊은 역사 해석의 쟁점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오늘날 많은 이가 혁명이라 칭하고 있는 4·19혁명은 혁명이었나? 정치체제의 변혁도, 지배집단의 교체도 이루지 못했고, 그 소박한 정권교체조차 불과 1년 만에 군부에 찬탈 당했던 4·19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유에서 지금 혁명으로 불리고 있나? 촛불집회가 즉각적인 구조변동을 이뤄내지 못했

다는 것이 그것이 혁명일 수 없는 명백한 근거라면, 4·19도 당연히 혁명이 아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19를 혁명이라 부르는 까닭은 아마도 1848년 혁명과 마찬가지로, 4·19를 폭발시킨 그 저변의 힘이 이후 수십 년간 현실에 맞서 현실을 변화시킨 집단적 이상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6~2017년의 촛불이 훗날 무엇으로 판명 날지 단언하기엔 아직 이르다. 또한 그것이 훗날 무엇이 될지 이미 알고 있는 맹아가 촛불에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촛불의 명칭 역시 달라질 것이다. 그 윤곽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촛불의 정의는 아마도, 아직 혁명이 아니었으며, 장차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거대한 항쟁일 것이다.

5. 결론과 전망

1987년 이후 3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많은 포스트권위주의 사회들이 겪는 민주주의 결손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동시대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전진과 퇴보, 또 다른 전진을 거듭하는 역사를 겪어왔다. 2016~2017년의 촛불집회에서 시작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진 응축된 시간은 여러 측면에서 한 시대에 종지

부를 찍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것은 시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1987년 민주주의 도입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선거승리 지상주의의 민주주의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사건이었다.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참여자들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집권 여당, 그들의 국가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선거 승리가 민주적 정당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것처럼 확장된 민주주의 이념을 시민 권력과 헌법 기구의 결합을 통해 현실에서 관철하는 데 성공한 한국의 경험은, 선거민주주의의 외양 아래 실제로는 선거에 이르는 모든 일상적 정치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많은 포스트권위주의 사회에 중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시민 권력은 어느 시점에 돌발적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온 것이었다. 2000년대의 여러 대규모 촛불집회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억제하고 민주주의를 정치 엘리트 내의 과두적 경쟁으로 축소시킨 87년 정치체제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섰다. 촛불집회의 진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 간에 소통하고 연결하며 동원하고 전략적 숙의를 하는 방법을 체득했고, 제도정치 행위자들을 압박하고 변화시키며 그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능력을 성장시켰으며, 대의정치와 헌법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것의 급진적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보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

은 단지 촛불집회의 형식과 행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적 역량의 원천과 성장·확산의 과정을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마치 한국사회에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꾸준한 전진이 있었으며, 2017년의 승리가 그러한 단선적 민주화 과정의 최종적 승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목적론이다. 목적론은 역사를 망각하고 현재를 절대화할 때 생겨난다. 이 글이 보여주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연이어 탄생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공고화되었고 역행은 불가하다는 평가가 팽배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불과 몇 년 안에 한국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돌릴 수 있었다. 반대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와 안정적 지지율을 보면서 한국사회에 민주주의 토양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절망적 공기가 지배했다. 하지만 2016년 촛불집회의 폭발은 권위주의적 퇴행 속에서도 사회 저변에 시민적 에너지가 뜨겁게 잠복해 있었음을 입증했다.

마찬가지로, 촛불로 탄생한 현재의 민주주의 역시 상반된 미래에 열려 있는 여정의 한 중간역일 것이다. 그것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넘어서는 새 역사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참여정부 버전 2가 되어 재권위주의화의 과거를 미래에 반복할 위험도 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1987년 이후 지속된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가 2016~2017년의 촛불, 탄핵, 정권교체를 통해 오직 부분적으로만 극복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글은 1987년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로서 포스트권위주의의 문제와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 공존과 얽힘을 들었고, 2000년대 후반 이후의 급속한 재권위주의화가 단지 권위주의 세력의 잔존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데에 기인했음을 강조했다. 2016~2017년 촛불집회는 재권위주의화 경향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항의는 유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과 탄핵 후에도 민주주의 정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을 경감시킬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권위주의 세력의 부활이 바로 이 문제 상황을 자양분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깊을 수 있다. 단지 민주주의의 구체적 무능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환멸이 확산되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 그 환멸은 여성,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노조, '좌파', 북한에 대한 증오로, 그리고 그 증오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이를 향한 적대로 옮겨갈 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사도매저키즘적 혐오로, 때로는 헤테로포비아적 공포로, 때로는 양자의 기묘한 조합으로 표출될지 모른다. 잔존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이 만약 영리하다면 바로 이 새로운 전선에서 화려한 부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영리하지 않길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을 먹여 살릴 환멸을 예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1987년 독재 종식 이후 정확히 30년이 지나서야 구시대의 주인공

들이 불명예스럽게 스러졌다. 2017년에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위대한 승리의 서사를,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선구자를 자임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에까지 전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조용히는 새로운 도전의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 불확정성의 시간은 가능성의 장이면서, 동시에 역진의 위험이 도처에 놓인 경합의 장이기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8. “지역주의는 변화했을까.” 이현우·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2007 한국대선 패널조사 연구』. 서울: EAI 동아시아연구원. 67-93.
- 권영숙. 2018.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경제와 사회』. 117. 62-103.
- 권혁용.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투표.” 이현우·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2007 한국대선 패널조사 연구』. 서울: EAI 동아시아연구원. 151-177.
- 김동춘. 2006.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기업사회의 변환과 과제』. 서울: 도서출판 길.
- 김윤철. 2018.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역사적 맥락과 ‘마지노선 민주주의.’” 『21세기 정치학회보』. 8(1). 1-19.
- 김종엽 엮음. 2009. 『87년 체제론』. 서울: 창비.

- 김종엽. 2017. 『분단체제와 87년 체제』. 서울: 창비.
- 김주호. 2017. “독일 대안당의 시장급진적 정책과 비수혜집단의 지지: 정책과 지지집단의 불일치, 그리고 그 원인.” 『유럽연구』. 35(4). 119-161.
- 김한식. 2017. “프랑스 극우의 신화와 이데올로기: 마린 르펜의 정치담론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80. 169-204.
- 김호기. 1999.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서울: 나남.
- _____. 1995.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나남.
- 류재성·송병권·홍지연. 2008. “누가 경제투표를 하는가? 사회경제적 변인 분석.”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다』. 서울: 생각의 나무. 249-288.
- 박영신. 2018. “역동 민주주의의 길: 체제와 공공 참여.” 『현상과 인식』, 42(1). 17-42.
- 박종민·오현진. 2018. “서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질.” 박종민·마인섭 편. 『한국 민주주의의 질』. 서울: 박영사. 1-24.
- 박종민·윤건수. 2014. “한국 국가관료제의 세 가지 전통.” 『한국행정학회보』. 48(1). 1-24.
- 브루이, 존. 2009. “1848년의 혁명들 - 급진주의·자유주의·보수주의의 혼전.” 데이비드 파커 외. 『혁명의 탄생』. 박윤덕 옮김. 서울: 교양인. 239-280.
- 브린튼, 크레인. 1983. 『革命的 解剖』. 차기벽 옮김. 서울: 학민사.
- 손호철. 2006.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서울: 이매진.
- _____. 1997.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서울: 사회평론.
- 신광영. 2016. “왜 스웨덴에서 극우정당이 급성장하는가?.” 『스칸디나비아연구』. 18. 1-30.
- 신진욱. 2016. “한국에서 결손민주주의의 심화와 ‘촛불’의 시민정치.” 『시민과 세계』. 29. 1-26.

- _____. 2015.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의 질: 2000년대 여론의 추이와 선거정치.” 『한국사회정책』, 22(3), 9-39.
- 신진욱·이영민. 2009. “시장포퓰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 이명박 정권의 정책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경제와 사회』, 81, 273-299.
- 오창현. 2009. “혼합체제 확산의 정치체제 분류 및 분석상의 의의.” 『한국정치학회보』, 43(1), 229-254.
- 이병천. 2002. “민주주의 이행과 시장의 시대.” 『시민과 세계』, 2, 73-92.
- 장진호. 2013. “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 『기억과 전망』, 28, 183-223.
- 전병유 편. 2016. 『한국의 불평등 2016』. 서울: 페이퍼로드.
- 정병기. 2018. “2016~2017년 촛불 집회의 성격: 1987년 6월 항쟁 및 2008년 촛불 집회와의 비교.” 『동향과 전망』, 104, 374-399.
- 조희연·김동춘·오유석 편. 2009.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파주: 한울.
- 천정환. 2018. “1987년형 민주주의의 종언과 촛불항쟁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문화과학』, 94, 22-44.
- 최장집. 2008.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생각의 나무.
- _____.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한귀영. 2011. 『진보대통령 vs 보수대통령』. 서울: 폴리테이아.
- 홉스봄, 에릭. 1984. 『革命의 時代』. 박현채·차명수 옮김. 서울: 한길사.
- Bogaards, Matthijs. 2009. “How to Classify Hybrid Regimes? Defective Democracy and Electoral Authoritarianism.” *Democratization*, 16(2), 399-423.
- Bosch, Agusti, and Durán, Iván M. 2017. “How does economic crisis impel

- emerging parties on the road to elections? The case of the Spanish Podemos and Ciudadanos.” in: *Party Politics*, DOI: <https://doi.org/10.1177/1354068817710223>.
- Bugarič, Bojan. 2015. “A crisi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post-Communist Europe: “Lands in-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3(1), 219-245.
- Calhoun, Craig. 2013. “Occupy Wall Street i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4(1), 26-38.
- Carothers, Thomas.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1), 5-21.
- Castels, Manuel. 2012.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Cambridge, UK, and Malden, MA: Polity.
-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Two volume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MIT Press.
- Croissant, Aurel. 2010. “Analyse defekter Demokratien,” K. H. Schrenk and M. Soldner (ed.). *Analyse demokratischer Regierungssystem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93-114.
- Croissant, Aural, and T. Schächter. 2009. “Demokratiestrukturen in Asien: Befunde, Determinanten und Konsequenzen,”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19(3), 387-419.
- Crouch, Colin. 2004. *Post-Democracy*. Cambridge, UK, and Malden, MA: Polity.
- Dahl, Robert A. 1998.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ella Porta, Donatella. 2011. *Democrazie*. Bologna: Il Mulino.

- Diamond, Larry. 2003. "Can the Whole World Become Democratic? Democracy,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Policies." UC Irvine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http://escholarship.org/uc/item/7bv4b2w1>.
- _____.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13(2), 21-35.
- Diamond, Larry, Juan J. Linz, and Seymour Martin Lipset (ed.). 1988.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Boulder: Lynne Rienner.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 Gabriel, Oscar W. 1987. "Demokratiezufriedenheit und demokratische Einstell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2/87, 32-45.
- Greskovits, Béla. 2015. "The Hollowing and Backsliding of Democracy in East Central Europe." *Global Policy*, 6(1), 28-37.
- Gunther, Richard, P. Nikiforos Diamandouros, and Hans-Jürgen Puhle (ed.). 1995. *The Politic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in Comparative Perspective*.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bermas, Jürgen.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Frankfurt/M.: Suhrkamp.
- Haggard, Stepan, and Robert Kaufman. 2008. *Development, democracy and welfare state, Latin America,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 Ming-sho. 2010. "Understanding the Trajectory of Social Movements in

- Taiwan (1980-2010).”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3, 3-22.
- Joas, Hans. 2017. *Die Macht des Heiligen. Eine Alternative zur Geschichte von der Entzauberung*. Frankfurt/M.: Suhrkamp.
- Jones, Brian Christopher, and Yen Tu Su. 2015. “Confrontational Contestation and Democratic Compromise: The Sunflower Movement and Its Aftermath.” *Hong Kong Law Journal*, 45, 193-210.
- Keane, John. 2009.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 Levitsky, Steven, and Lucan A. Way (ed.). 2010.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ópez, Javier. 2018. “Electoral Authoritarianism, Elective Dictatorship.” *Social Europe*, December 11.
- Manz, Thomas. 2018. “Bolsonaro: the end of Brazilian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ciety*, November 1.
- Merritt, Anna J., and Richard L. Merritt (ed.). 1970. *Public Opinion in Occupied Germany*. Urban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erkel, Wolfgang. 2014. “Is capitalism compatible with democracy?”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Politikwissenschaft*, 8(2), 209-128.
- _____. 2004. “Embedded and Defective Democracies.” *Democratization*, 11(5), 33-58.
- O’Donnell, Guillermo. 1996. “Illusions about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7(2), 34-51.
- _____. 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1), 55-69.

- Offe, Claus(ed.). 2003. *Demokratisierung der Demokratie. Diagnosen und Reformvorschläge*. Frankfurt/M. and New York: Campus Verlag.
- Quiroga, Alejandro. 2018. "A new political bandwagon? The rise of Ciudadanos in Spain." *LSE European Politics and Policy*(EUROPP) Blog(23 April, 2018).
- Schedler, Andreas. 1999. "Conceptualizing Accountability." A. Schedler, L. Diamond, and M. F. Plattner (ed.), *The Self-Restraining State: Power and Accountability in New Democracies*. Boulder, CO: Lynne Rienner. 13-28.
- Schedler, Andreas(ed.). 2006. *Electoral Authoritarianism*.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 Schmidt, Manfred G. 1998.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Historische Entwicklung und internationaler Vergleich*. Opladen: Leske+Budrich.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niszki, Jadwiga. 1984. *Poland's Self-Limiting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rrow, Sidney. 2011. "Why Occupy Wall Street is Not the Tea Party of the Left." *Foreign Affairs*, October 10.
- Tilly, Charles. 1999. *Die Europäische Revolutionen*. München: C. H. Beck.
- Zakaria, Fareed. 1997.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Nov./Dec. 22-43.

Abstract

Candlelight Protests and the Pendular Movement of Korean Democracy, 1987-2017

With a focus on the simultaneousness of the problems of post-authoritarian democracy and post-democracy

Shin, Jin-Wook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This article analyzes the key problems of South Korean democracy since 1987 and the processes that led to the re-authoritarianization under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 In that context, it discusses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candlelight protests an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of 2016-17 and the possible challenges to Korean democracy in the future. For each goal, the argum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Korean democracy since 1987 is characterized by the simultaneousness of the problems of democratic deficits typical to ‘post-authoritarian’ societies and those of ‘post-democracy’ in advanced democracies experiencing neoliberal changes. It was the inability of the democratic governments to deal with the latter issues that promoted the re-authoritarianization since 2008. Second, the candlelight protests in 2016-17 not only was successful as a defensive uprising to block the re-authoritarianization processes and to restore the democratic institutions, but also showed the substantial force of citizens’ power, their ability of realizing the principles of accountability, and new democratic ideals beyond those of the 1987 uprising. Third, despite such

achievements, the problems of post-democracy, which caused the democratic backsliding since the late 2000s, remained unresolved, such that they can be a big challenge to Korean democracy in the future.

■ **Keyword:** Democratization, Defective Democracy, Post-Democracy, Candlelight Protest, Presidential Impeachment

투고: 2018/10/04 심사: 2018/10/15 확정: 2018/11/14